

2023.03.28.(화)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 Tel 02-6788-3201, Fax 02-6788-3635

이원정 총괄팀장 010-5387-9680 / 이지환 보좌관(우원식 의원실) 010-9254-9137

3.15 한국외이퍼 공권력 투입 관련 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및 윤희근 경찰청장 사과요구

2023년 3월 28일(화) 09:40, 국회 소통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의원)는 3월 28일(화)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외이퍼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일동, 전국금속노동조합, 안산시민행동과 함께 '23.3.15 한국외이퍼 경기도 안산공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경찰투입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윤희근 경찰청장의 공식 사과 요구 및 인권위의 긴급구제절차 개시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이 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3.15자 대규모 공권력 투입이후 윤희근 경찰청장 및 경찰청의 설명 중 △ 한국외이퍼 노사분규는 노사간 교섭, 노동부 중재가 잘 이뤄지던 사업장이고 노사간 충돌이 없었음에도 대규모 경찰이 투입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 경찰이 노동부로부터 노조의 불법행위 의견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한 것이 거짓말이었던 점(3.24자 노동부 입장표명), △ 경찰의 업무방해 판단 자체의 위법요소(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에 노조동의 없이 설비반출 등 매각 금지조항이 있어 사측의 요청을 경찰이 그대로 수용한 문제점 및 노조법 92조 위반 소지) 등을 지적했다(*보도자료 첨부 참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한국외이퍼 사측은 본인들 스스로 노동조합의 동의없이 설비 반출 등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체결하고도 경찰력 동원을 요청했고 경찰은 고의 혹은 과실로 공권력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경찰의 민사불개입이라는 대원칙이 무너지고, 위법적이고 편파적인 공권력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사안 책임의원인 국회 환노위 우원식 의원은 “윤석열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출국전날 일본기업의 위법에 맞서는 한국노동자들을 대한민국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하며 일본덴소그룹의 사설 경비업체처럼 행동한 기가 막힌 사건”이라면서 “사측이 용역을 투입하는 날짜와 대규모 경찰병력 투입 시점이 사전에 협의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누구의 지시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지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조합측 대리인인 장석우 변호사(민주노총 금속법률원)는 3.15 공권력 운영의 위법성을 설명하면서 금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신청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윤희근 경찰청장 및 우종수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직권남용 고소 및 국가손해 배상청구 등 경찰책임자들에 대한 추가적 민형사조치도 예고하였다.

※ 기자회견 사진 별도 첨부

3.15 한국와이퍼 공권력 투입 관련 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및 윤희근 경찰청장 사과요구 국회 기자회견

‘23.3.28.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개요

- (배경) 일본텐소그룹의 위법적 행동에 맞서고 있던 한국와이퍼 노동자(경기도 안산 소재)들에게 3.15자로 발생한 대규모 경찰투입사태(약 700여명)의 문제점(경찰의 위법행위 등) 및 진상규명(한일정상회담 전날 발생 등) 사안을 알리고 관련하여 윤희근 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함. 동시에 경찰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등 법적·행정적 대응의 취지를 설명하고자함
- (일시) ‘23. 3. 28.(화) 09:40~10:00
- (장소) 국회 소통관
- (주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한국와이퍼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안산시민행동, 전국금속노동조합
- (참석) 박주민 을지로위원장, 우원식, 강민정, 이동주 국회의원 등
함재규 전국금속노조 부위원장, 이규선 금속노조 경기지부장 등
장석우 민주노총 금속법률원 변호사, 최윤미 한국와이퍼 분회장 등
구희현 안산시민행동 공동대표

□ 진행순서 *식순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시 간		내 용	비 고
09:40~09:42	2'	기자회견 참석자 소개	*사회: 이원정 을지로위원회 국장
09:42~09:45	3'	모두발언	박주민 을지로위원장
09:45~09:51	6'	규탄발언(3명)	우원식 의원 함재규 금속노조 부위원장 최윤미 한국와이퍼 분회장
09:52~09:55	3'	인권위 진정 개요 (경찰위법성 설명)	장석우 민주노총 금속법률원 변호사
09:55~10:00	5'	기자회견문 낭독	강민정,이동주 의원 + 구희현 안산시민행동 대표

[첨부2]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3.15 한국와이퍼 경찰 폭력사태를 규탄한다. 경찰청장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문책 및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윤희근 경찰청장과 경찰청은 더 이상의 거짓말을 멈추고 당장 사과하십시오.

윤희근 경찰청장은 3.22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315자 경기도 안산 한국와이퍼공장에 대한 경찰력 투입 사유로 “노사간 물리적 충돌로 인한 112 신고가 다수 있었다” 고 발언하며 마치 노조의 폭력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와이퍼 노사는 3.15 경찰력 투입전날까지도 노동부의 중재와 34차례의 노사대화가 진행되며 단 한번의 물리적 충돌도 없었던 사업장이었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투입된 3.15에도 노사간 충돌은 없었습니다. 경찰청장이 국회에 출석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또한 경찰청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행안위 및 환노위 의원실을 대상으로 3.15자 상황을 설명하면서 노사간 민사소송에 상황을 보고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고, 노동부가 노조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의견회신을 주었기 때문에 경찰력을 투입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3.24자 국회 답변 제출을 통해 “경찰에 노조활동의 위법성에 대한 의견을 준 바 없다”고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행안위, 환노위 국회의원실을 상대로도 거짓해명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애초 315자 공권력 동원은 경찰의 명백한 위법 행위였습니다!

경찰이 3.15 경찰력 동원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노동부가 노조의 활동이 불법이라는 의견을 주었다는 의견회신이었지만 이는 거짓말임이 금방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마지막 남은 근거는 한국와이퍼 사측의 시설보호 요청과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이 법원에 제기한 청산금지가처분이 기각되었기 때문에 노조의 장비반출 저지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이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업무방해”로 판단한 것은 큰 실수이자 위법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노조법상의 「고용안정협약」에는 노동자들과 동의없이 해고, 청산, 매각 등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와이퍼 사측은 본인들 스스로 노동조합의 동의없이 설비반출 등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체결하고도 경찰력 동원을 요청했고 경찰이 응한 것입니다. 게다가 단체협약인 고용안정협약의 주요 내용을 어기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92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결국 한국와이퍼 사측의 위법성 있는 생산설비 반출행위를 경찰이 공범처럼 도와준 꼴입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윤석열정부 경찰의 현주소입니다.

경찰의 잘못된 판단과 위법한 공권력행사로 피해자들이 발생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한국와이퍼의 노사분규는 35차례의 교섭과 10여차례가 넘는 노동부 중재가 계속되면서 점점을 찾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가봐도 대화중이고 권리분쟁중인 사업장에 대규모 경찰이 투입되어 죄없는

노동자들이 연행되고 다쳤습니다. 이는 경찰의 민사불개입이라는 대원칙이 무너지고, 위법적으로 사측의 편만을 들어준 편파적 공권력 운영입니다.

게다가 윤석열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출국전날 일본기업의 위법에 맞서는 한국노동자들을 대한민국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하여 진압하였습니다. 통상 행정대집행이나 노사분규 현장에서 질서유지의 업무만 담당하기 때문에 적극적 개입이 어렵다고 스스로 말해온 것이 경찰입니다. 그러나 3.15 경찰은 일본텐소그룹의 사설 경비업체처럼 행동하였습니다. 특히 사측이 용역을 투입하는 날짜와 대규모 경찰병력 투입 시점이 사전에 협의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3.15 한국와이퍼 공장에는 경기남부경찰청의 중심으로 서울지방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의 인력까지 동원되었다고 하니, 윤회근 경찰청장뿐만 아니라 우중수 경기남부경찰청장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의 지시로 왜 하필 한일정상회담 전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지 그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합니다.

국회차원의 진상규명과 더불어 이제 경찰에 대한 본격적 문제제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회 상임위 대응과 동시에 대한민국 인권의 최후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와 경찰 폭력의 부당함에 대한 진정절차부터 제기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폭넓은 조사를 통해 경찰의 위법·부당한 공권력행사가 판단되길 희망합니다. 또한 현재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중 약 20여명이 3.15 경찰의 물리력행사로 부상을 당했기에 향후 직권남용 고소 및 국가손해배상청구를 통해서 경찰의 민형사적 책임도 묻겠습니다. 경찰의 책임있는 행동을 끝까지 이끌어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일본기업의 청산할 권리는 지켜주고,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대한민국 노동자는 탄압하는 윤석열정부를 과연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고용합의서를 손에 쥐고도 일본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억울하게 일터에서 쫓겨나는 것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 우리 국민들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2023. 3. 28(화)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한국와이퍼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안산시민행동 · 전국금속노동조합

[보도참고1] 한국와이퍼 사태 개요 설명

○ 주요내용

- 글로벌 자동차부품사인 덴소의 한국자회사인 한국와이퍼는 현대·기아완성차 와이퍼납품의 28%를 차지하는 회사로서, 회사의 갑작스런 신차수주 중단으로 불안을 느낀 노동자들이 '18.6.13자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분회 설립하고, 고용안정을 요구하여 '20년12월·'21년10월 2차례에 걸쳐 고용안정합의서 작성

※ 고용안정합의(핵심) : 노조 동의없이 매각,청산,해고 금지/ 일본덴소그룹 계열사 + 한국와이퍼사측 연대서명

- 그러나 회사는 '22.7.7자로 고용안정협약을 위반하고 일방적 청산계획 발표 후 노동자 개인 면담 및 문자통보를 통해 희망퇴직 강행하면서 노사갈등 격화됨. 노동조합은 노조합의 없는 청산반대 및 고용승계 요구를 걸고 파업진행과 동시에 최윤미 한국와이퍼 분회장이 '22.12.21까지 국회앞 단식농성(44일간) 진행하였고, 고용노동부도 특별근로감독 시행하고 결과 발표예정(*10월 조사살시했으나 아직 결과 미발표)

○ 최근 노사상황

- 최윤미 한국와이퍼 분회장 단식 중단이후 3.14까지 노사 교섭은 중단되지않고 34차례 진행중이고, 노동부 안산지청 중재도 10여차례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었음
- 그러나 와이퍼 생산은 '22.12.29자로 영업종료된 상태이고, '23.1.8부터 법적 청산절차에 돌입한 후 1.17자로 210여명 노동자 전원해고 통보하였으나 '23.1.30자로 법원이 “한국와이퍼는 단체협약상 절차에 따른 금속노조와 합의 없이 채권자 소속 조합원들을 해고해서는 안 된다” 는 단협위반금지 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해고는 취소된 상황임

○ 특이사항

- 3.15 경찰 약 700여명이 한국와이퍼 사측의 생산설비반출을 돕기 위해 공장내외로 투입되어 한국와이퍼 노동자중 다수 부상자 발생

